

<사회보장정보 Brief>

2018년 6월 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료 활용 소득·재산조사방식의 영향

박규범 연구원
(☎: 02-6360-4627)

1. 들어가며

■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경제력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득재산 항목별 조사방식(소득인정액 방식, 재산평가분리 방식), 자격확인 조사방식, 건강보험료 부과금 활용 조사방식 등이 있음.

■ 이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을 활용한 조사방식은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유용성이 있음.

■ 그러나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건강보험료 부과금이 변화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금을 통해 경제력을 평가하는 방식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2. 소득·재산조사 방법의 종류

■ (소득인정액 방식) 소득과 재산을 개별 항목별로 조사한 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단일 값인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경제력 평가 방식

■ (재산평가분리(cut-off) 방식) 소득과 재산을 개별 항목별로 조사하고, 소득과 재산별로 각각의 선정기준선을 설정하는 경제력 평가 방식

■ (자격확인 조사방식) 특정 복지급여의 수급자격을 확인하여 경제력 평가를 같음하는 방식

■ (건강보험료 부과금 활용 방식) 직장·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으로 경제력을 평가하는 방식

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주요 내용과 예상되는 영향

■ (지역가입자)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최저보험료(13,100원)가 적용됨
(지역가입자) 2017년 기준 지역가입자 하위 14~35.5%가 최저보험료(13,100원)를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선정기준이 최저보험료를 적용받는 구간에 존재하는 사업은

건강보험료로 소득판정이 불가능함.

<건강보험료 판정 불가능한 소득구간 예측>

시기	구분	건강보험료 판정 불가능한 소득구간('17년 기준 예측)
건강 보험료 개편 ('18.7.)	1인 가구 이상사업	'17년도 기준중위소득 약110%미만까지는 최저 보험료로 판정되는 가구가 포함될 것으로 예측 →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10 미만인 사업은 건강보험료로 소득판정 불가능
	2인 가구 이상사업	'17년도 기준중위소득 약65%미만까지는 최저 보험료로 판정되는 가구가 포함될 것으로 예측 →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70% 미만인 사업은 건강보험료로 소득판정 불가능

■ (피부양자)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소득·재산
기준의 강화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

(피부양자) 약 32만 세대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기에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변동(신규 수급자
유입 및 기존 수급자 탈락)이 예상됨.

■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한액이 높아지고(월 239 → 309.7만원),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강화

(직장가입자) 약 0.8%(세대 기준)의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에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중 일부가 탈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4. 맺음말

■ 건강보험료 부과금을 활용한 경제력 평가 방식은 유용성이 높으나,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라 건강보험료로 판정이 불가능한 소득
구간이 발생하는 등 활용에 현실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소득수준을 판정
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선정기준의 조정 또는 다른 소득재산
조사 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새로운 방식의 도입 또는 다른 소득재산 조사방식으로 변경을
고려할 시 개별 복지사업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해야 함.